

대미투자특별법, 법안소위서 통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운영 골자
여야 만장일치... 12일 본회의 상정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 마련엔 이견

여야가 9일 대미투자특위 법안소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으로 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또,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왼쪽부터) 정태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박수영 야당 간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뉴시스

가 대미 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투자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 이를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충 등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외 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대미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미국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중 2000억달러는 반도체·핵심 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사업에 투입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사용된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정원오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 것”

서울시장 출마 선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수도 서울을 만들겠다”면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원오TV’에 올린 출마선언 영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정원오의 ‘시민주권 서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 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 성수동을 변화시킨 것을 성과로 거론하며 “이제 서울에서도 자유로운 시민과 창조적인 기업들이 마음껏 꿈과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고 AI 대전환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시민주권 서울을 실현하겠다”며 “AI에 기반한 ‘조건충족 자동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해 예측가능한 인허가 제도의 시행으로 기다림은 줄이고, 행정 속도는 두배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공약으로 ▲주거안심 ▲교통혁명 ▲돌봄 등을 내세웠다. 또 ‘경제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화수도 구축’을 위해 ▲서울형 특구 조성 ▲서북권과 동북권을 새 업무 중심축으로 키우는 도시구조 개혁 ▲서울 전역의 마이스(MICE) 인프라를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재편하는 문화수도 구축 정책 등을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6월 3일은 서울이 새로 태어나는 날”이라며 “오세훈의 시정 10년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 카드’, 정원오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이날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서예진 기자

조기추경 가능성에 靑 “논의 해박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최근 중동발 위기 대응에 따른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논의들을 많이 해박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유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당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사실 올해 경제 전망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다”며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시장 조치를 포함해서 직접 타격을 받는 사업과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헤쳐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고, 거기에 따른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석유 최고 가격제의 신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내 최고 가격제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 다. /서예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미등록 파장 이정현 “특정인 배려 없다”

국민의힘, 계파 갈등 심화
공관위, 오늘부터 면접 심사
“필요하면 추가접수 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절연(絶尹·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노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에서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추가접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특정인 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절연 등당의 노선 정상화를 요구해 온 오세훈 시장은 전날(8일) 오후 10시까지 마감이었던 국민의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요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은) 당에 대한 극도의 불만 표시”라며 “(지도부가)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것을 중도층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지층의 이탈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안과미래 소속 조은희 의원도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은) 우리 당의 현주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성찰하면서, 단호히 선을 긋고 나간다는 다짐과 후속 조치가 당의 명의로 발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4선까지 하신 우리 당의 어른”이라며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셔야 할 분이 어 린애같이 떼쓰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웠다”고 비판했다.

또 조광환 최고위원은 이날 친한계와 오 시장 등을 겨냥해 “지금 우리당을 몰아붙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가혹하다”며 “이미 몇 차례 반복해서 얘기했음에도 (당내 노선 변화 등) 똑같은 요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배신자가 오히려 기세등등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면접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 시장 등록 없이도 공천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관위 7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공관위는 오는 10일 서울·대구·인천·대전·세종·경기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지역별)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논의를 거쳐 추가 접수를 받도록 하겠다”며 “공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특정인을 상대로 규정을 만들거나 배려하거나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다만 이 위원장은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간은 반드시 세우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이 추가 모집을 안 하겠다, 비위됐다는 말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의 고민은 이해한다면 “문을 계속 열어놓고 더 좋은 인물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추가 접수를 통해 (후보 등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절연’ 고심

송언석 원내대표 작심발언
“당 차원 반성의 뜻 다시 밝혀야”

국민의힘은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당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발언이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 섰다”면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당의 노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총의를 모으고 하나가 돼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해당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 탈당해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저는 우리 당에 윤 전 대통령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바가 있다. 이 점을 오늘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서 정리해야 된다”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리게 돼 국민께 송구하고 반성하는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우리 당에 계엄을 옹호한 사람은 없다”며 “우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옹호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윤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무머리 재판 1심 판결과 관련해 ‘절연(絶尹)’ 노선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윤어게인’ 노선을 고수하는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